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참여당과의 통합을 막아냅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11월 27일에 당대회를 열어 국민참여당(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와의 통합을 결정하려한다.

지난 8월과 9월의 당대회에서 거듭 대의원들이 거부했던 내용을 다시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9월 25일 당대회 때 내려진 '참여당은 진보 통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말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9월 25일 당대회 직후부터 "우두머리 수준에서 쉬쉬하며" (<한겨레>) 3자 통합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이정희 대표가 당대회 결정의 "의미를 깊이 새겨 대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공문구였다.

이것은 민주적 의사 결정 기구와 절차들을 깬 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당대회를 여는 것도 대의원과 당대회를 거수기로 여긴다는 뜻이다.

더구나 소위 '3자'가 밀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한말만 느껴진다. 진보의 원칙이 아니라 오로지 상층에서의 공직·당직 자리 다툼만 있었기 때문이다. 지분 다툼 때문에 결렬될 뻔하다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겉으로 화려한 명분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지분 협상으로 공직과 당직을 나눠 가졌던 기성 정당 이합집산의 조그만 잔재도 통합진보 정당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6.7 국회 연설에서 이정희 대표)이라고 말해 놓고 바로 그 반대로 한 것이다.

특히 한때 '당원총투표'로 참여당과 통합하자며 "진성당원제의 정신"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간단히 내팽개친 것은 통탄스럽다. '진성당원제'를 소수 지도자들의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빼먹는 꾀감으로 여긴 것이다.

현재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술을 마시는 게 목적이면 원샷이든 투샷이든 취하면 되는" 것이라고, 통합연대 노회찬 공동대표는 "소주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는 것보다 섞어 먹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 통합을 희화화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던 통합연대 지도자 3인(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의 돌변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아무리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집요한 압박이 있었다 해도 이해타산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3인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다.

물론 우리는 이 3인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원칙있는 반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하며 경계해 왔는데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적 한계 때문에 3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신을 받으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왔다. 따라서 통합연대 지도자들의 변심이 참여당과의 통합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대의명분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이 통합은 결코 환영받을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 통합은 반민주적 밀실 야합일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 물론 우리는 한미FTA 저지 투쟁 등 사안에 따라 이뤄지는 참여당과의 공조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당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동맹(예컨대 당 통합)을 맺을 수는 없다.

짜증과 상처

왜냐하면 참여당은 주요 지도자가 고위 관료나 기업주 출신이며 강령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는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원샷'이라며 참여당을 끼워넣은 3자 통합은 '진보 통합'이 아니다.

이것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진보의 분열을 낳을 수 있고 결국, 무엇보다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인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좌파적 창당 강령을 폐기했고, 참여당은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경직성과 계급적 편향성"을 계속 문제 삼으며 통합하면 이것을 "혁신"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리고 참여당이 끼어들면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의 통합 등 "당초 추진했던 모든 진보진영의 '대통합'에는 실패"(<경향신문>)했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분열이 커져 왔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전직 대표들마저 진보신당과 민주노총 일부 등 "진보정치 세력의 절반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참여당과의 통합은 반한나라당·비민주당 정서 속에 안철수 바람이 불고 참여당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상황에 더더욱 옳지 않다. 민주당 아류 친노세력과 몸을 섞

으며 진보의 색깔을 흐릴수록 존재감만 약해질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런 긴 안목에서 노동자 진보정당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고민하진 않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의석 수에만 골몰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한미FTA 저지 투쟁에 온 힘을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말이다. 이런 근시안적 시각이 과연 총선에서 성과를 낼지조차 의심스럽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원샷 통합 정당'의 지지율은 5퍼센트에 불과해서 시너지 효과도 없었다.

유시민과 참여당이 진보정당과 통합 후 야권단일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이 금세 사분오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경향신문>도 "향후 지분·주도권 다툼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포기하지 말고 막아야 합니다

결국 참여당과의 통합은 관심과 감동이 아니라 짜증과 상처만 남기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렇게 끈질기고 통합연대도 동의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총선까지 시간도 얼마 없고 다른 대안도 없지 않냐'고 체념해서도 안 된다.

시간과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대의명분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금세 사분오열과 파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안 된다. 이미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시도를 당대회에서 두 번이나 막아낸 저력이 있다.

9월 당대회 전까지 무려 3천여 명이 넘는 당원과 활동가들이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서명을 했고 민주노동당 전직대표 3인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조합·단체 대표자들이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반대는 여전히 유효하며 변할 이유가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우리에게 한미FTA 저지 투쟁 등에서 진보의 단결을 추구하고, 진보정당다운 독자적 정책을 제시하면서 선거를 대비해 지역 기반을 다진다는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한 민주노동당 당대회 소집을 반대하며, 당대회가 소집되더라도 통합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 운동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므로 독립적 진보정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 당대회 결과가 무엇이든, 이 투쟁에 함께한 세력과 성과는 앞으로도 주요 고비마다 노동자·진보 운동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여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아니다

현재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에서 진보 정당들은 참여당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한때 한미FTA를 지지했던 참여당의 태도가 바뀐 것은 우리 투쟁이 낳은 성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공동의 과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

특히 우리는 참여당의 평당원, 지지자들과 협력하길 적극 원한다. 그들은 대부분 2008년 촛불시위 등에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당 지도부나 참여당 자체의 성격은 달리 봐야 한다. 참여당은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이라며 통합을 환영했지만, 전태일로 상징되는 노동자·민중 운동과 노무현 정부 계승세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

지난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김주익이 목 매 죽고, 농민 전용철, 흥덕표가 맞아 죽고, 허세욱이 불타 죽는 일이 언제였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라며 참여정부 시절을 떠올렸다. 박웅두 대의원은 “과거를 묻지 말자는데 어떻게 묻지 않을 수 있느냐”며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이 농민들을 짓밟고 선혈 낭자하게 진압하던 기억”을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참여당의 현재 정책과 입장도 진보정당과는 명백히 다르다. 우선 참여당은 현재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FTA 추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참여당의 노동정책도 결코 ‘친노동’이 아니다. 오히려 “친기업”을 강조하는 참여당은 35시간 노동제, 비정규직·파견제 철폐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이랜드, 현대차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비정규직 악법도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한다.

‘해의 파병’을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참여당의 입장이다. 진보정당이 주장해 온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참여당은 “엄청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핵발전 폐지도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참여당이 진보정당들처럼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 인력과 돈을 충원하지 않고, 고위 관료나 기업주 출신 등이 이끄는 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당 강령은 “기업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참여당은 지난 9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했던 통합진보정당 강령 초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한다. “대중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이념적 접근(사회주의 이상, 세계변혁 운동의 성과 계승, 자본주의 폐해 극복 등)에 대해 거듭 우려하고 우리 당의 참여를 위해서는 ... 시정돼야 한다”, “노동자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함.” 결국 민주노동당·참여당·통합연대 지도부가 이번에 합의한 통합 정당의 강령안에서 이 내용들은 모두 빠져 버렸다.

강령, 실천, 계급적 기반에서 이런 큰 차이가 절충적 강령을 합의하고 통합 지도부를 꾸린다고 사라지진 않는다. 따라서 통합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 투쟁 등 실천 속에 함께하며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토론하고 검증하는 게 참여당 평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좋다.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목소리들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한 밀실 야합 사실이 알려진 후 곳곳에서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는 당대회 결과에 불복하는 지도부를 비판하며 여러 지역 위원장과 대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 대의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자, 진보 지식인, 좌파 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권영길·강기갑·천영세 민주노동당 전직 대표는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9월 중순까지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3천1백64명이 선언에 동참했고, 금속노동자 1천31명도 선언을 냈다. 금속노조·건설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선언을 발표했고, 학생회창·보건의료인·성소수자 등 진보진영의 다양한 세력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레프트21>에 실린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목소리를 축약해 싣는다.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것은 추잡한 밀실 야합”

참여당과의 통합은 진보정당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씨는 전형적인 정치철새의 모습입니다. 불과 두어달 전까지 ‘참여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대표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 다. 지분 갖고 야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당대회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특정 지역구 후보나 당의 지분 문제로 논의한 것을 보면 정말 추잡합니다. 이렇게 꿈수부리고, 말 바꾸기 하고, 변신하고, 변절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우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태일 열사를 욕보이는 것”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습니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당과 통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학생회, 각종 단체 차원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인 장소에 부착하고, 온라인에도 퍼 나릅니다.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의 대표자들이 통합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학생회 선거

그런데 다시 상층에서 대의원대회 결정에 반하는 통합을 추진한 것입니다.

얼마 전 참여당이 3자 통합을 두고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들으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을 때려 죽였고, 한미FTA를 추진했고, 파병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를 갖다 붙여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을 막아내지 못하면 현장 노동자들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박노자 교수



“역사에 오점을 남기려는가”

‘3자원샷 통합’은 1990년 ‘3당 합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자들과의 무원칙한 야합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보스정치’로 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당원과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면서 무엇을 성취하려하는가? 참여당은 민의에 밀려 FTA찬성 입장을 반복하는 등 친민중적 제스처 일부 취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제스처일 뿐이다.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 많은 동지들의 적극적 의견표출이 필요하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비정규직은 참여당을 용납 못합니다”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한 몸이 된다면 서로 충돌하는 정책들이 남발돼,



밖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지향하는 건지 정체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참여당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폭행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참여당과의 통합은 이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한 결정입니다. 때려잡고 해고했던 세력을 비호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인력을 댄다? 폭탄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는 물과 기름이고 같이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야합 속에 사라진 진보 가치”

벌써부터 노동 진영에서는 이번 통합안에 반대한다는 것과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찬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당과의 통합이 노동진영의 단결을 높이는 진보대통합과는 정반대의 길이기, 기존 민주노동당보다 노동의 지지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3자 원샷 방식의 통합은 진보대통합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세도 아니다. 노동자 대중, 당원들과의 소통으로 막아내야 하고 막아낼 수 있다.

- 운동본부의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
-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진보 활동가들의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
- 자신이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의원에게 11월 27일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도록 촉구합니다.
- 각종 진보 언론들에 무원칙한 통합에 반대

- 하는 기사나 독자편지 등을 보내 보십시오.
-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 각종 기사들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공간에 퍼 나르고 알립니다.
- 그 외에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저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010-7726-2792 김재현)